

KB금융, 배당금 늘리고 자사주 매입... 기업가치 제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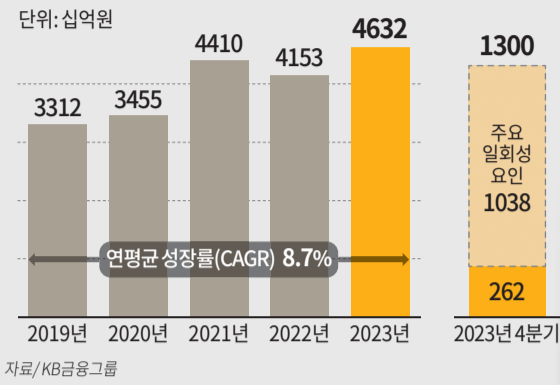
지난해 순이익 4.6조 '역대 최대' 실적 실적 개선, 안정적 비용관리 성장세 이자이익 5% ↑·수수료이익 4% ↑

KB금융그룹이 지난해 역대 최대 이익을 냈다. 이와 함께 주당배당금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에 나서 등 기업가치 제고에도 나섰다.

7일 KB금융에 따르면 2023년 당기 순이익은 4조6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비이자이익 중심의 견조한 실적 개선과 안정적인 비용 관리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KB금융 관계자는 "부문별로 고르고 강력한 수익창출을 이어간 결과 지난해 총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수준인 17.8%의 연간 성장률을 시현하며 약 16조원을 기록했다"며 "전사적 차원의 비용효율성 개선 노력의 결실로 그룹 영업이익경비율(CIR)도 역대 최저 수준인 약

KB금융그룹 당기순이익 추이



41.0%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4분기 당기순이익은 261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룹 희망 퇴직과 은행 민생금융지원 관련 참여은행 중 최대 금액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보수적인 손실율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등 일회성비용이 주로 반영됐다. 이를 제외한 경정 순이익은 약 1조 3000억원 수준으로 불확실한 경영상

황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과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12조1417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은행 원화 대출금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0% 성장하며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했고,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 자산 리프라이징(Repricing) 효과가 반영되며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됐다. 연간 NIM은 그룹과 은행이 각각

2.08%, 1.83%로 각각 12bp(1bp=0.01%p), 10bp 상승했다. 이와 함께 증권, 카드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이자이익 기여도도 꾸준히 확대됐다.

순수수료이익은 3조6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저성장·고물가로 소비심리 위축에 카드이용금액은 전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주식약정 금액 증가로 증권수탁수수료가 늘었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 핵심 사업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인수합병(M&A)을 통한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의 결실로 역대 최초로 4분기에 9000억원 이상 그리고 연간 약 3조7000억원의 수준의 순수수료이익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대손충당금전입비율은 0.67%로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1조378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296억원 증가했다. 선제적인 리스크관리의 일환으로 보수적인 미래경

기전망을 반영해 약 51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하고, 부동산 PF와 해외상업용 부동산 등 중점관리 섹터에 대해 약 754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쌓았다.

이사회는 "주당배당금은 기 지급된 배당금 총 1530원을 포함해서 전년도 2950원 대비 약 4% 증가한 3060원으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에 더해 약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해서는 "작년 2월에 발표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나오는 대로 적극 대응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복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최선"... 규제이행 감시체계 강화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 개최 "코인리딩방·유사수신 등 불법 만연" 4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이용자 보호를 강조하며 가상자산법상 규제를 철저히 준비토록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날 20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논란을 겪어왔다"며 "불공정·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용자보호

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처음으로 열린 사업자 CEO 간담회다.

이 원장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이

용자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혹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 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사업자는 우선 이달 중으로 사업자별 영위업무법상 의무 등에 맞춰 관련 내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법상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된 거래소별 자체적인 이상거래 적출기준,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은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3월 중으로는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4월까지의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보고·소통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이 원장은 "법 시행에 따른 제도권 진

입은 그에 상응해 규제비용 부담과 법상의무수행이라는 도전을 수반한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시장에는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제52회 강진 청자 축제

2024. FRI-SUN 2.23.-3.3.

The 52nd Gangjin Celadon Festival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오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